광주시 10건 중 8건 화재 오인출동

최근 3년간 오인출동 40% 급증

'소방력 낭비 심각' 지적 나와

광주지역 화재 오인 출동이 해마다 늘면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오인출동은 늘고 실제 화재 출동은 줄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화재 총 출동건수는 4587건으로 이 중 실제 화재에 의한 출동은 860건으로 18.7%에 불과했다.

연막소독, 연기, 타는 냄새, 방화기도 등 오인신고 출동은 1506건, 감지기 발신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은 2221건으로 오인출동이 3727건 82.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총 출동건수는 2016년 3268건에서 2017년 3823건, 지난해 4587건으로 2년새 40%가량 늘었다.

오인출동 건수도 2016년 2312건에서 2017년 2900건, 지난해 3727건으로 증가세다. 반면 실제 출동건수는 2016년 956건에서 2017년 923건, 지난해 860건으로 줄고 있다.

오인출동 건수가 늘면서 전체 출동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오인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736건, 서구 1794건, 남구 1,008건, 북구 2,249건, 광산구 3,12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70.7%, 2017년 75.8%, 2019년 82.3%로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오인신고에 의한 출동은 매년 2월과 6월에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방시설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7월과 8월, 12월과 1월 등 한여름과 한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임 의원은 "잦은 오인 출동은 소방력의 낭비와 더불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인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 상황, 원인, 날씨 등을 적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과 시민 홍보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일' 안용백 흉상 도로 점용

논란…보성군 '위치 측량' 의뢰

친일 인사 안용백 흉상이 국가 땅을 점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전남 보성군이 위치 측량을 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용백(1901~1977) 전 전남교육감 흉상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계 친일 인사로 분류된 안용백 흉상은 2013년 광주에서 철거됐지만 이듬해 후손들이 고향인 보성으로 옮겨 세웠졌고, 최근 흉상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흉상의 위치가 처음에는 안씨 문중 소유의 사유지로 알려졌지만 도로변에 있다는 점에서 도로부지 점용 논란으로 이어졌다.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안용백 흉상이 세워진 보성리 산 12-5 앞에서 GPS 측량기를 이용한 재측량을 실시해 지목상 도로부지와 임야의 경계인 것을 확인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흉상이 세워진 곳이 도로부지인지 사유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측량결과 도로부지로 확인되면 도로 점용 허가 여부 등을 점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 한 여고 소프트볼팀

학부모, 교장 해임 등 요구

순천의 한 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들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이 학교 교장의 해임과 학교 소프트볼팀 해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순천 강남여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학교 교장은 현 소프트볼팀의 감독을 마음대로 해임하면서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 등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과 폭행 등 소프트볼팀의 비리에 교장의 잘못도 확인됐지만 오히려 운동부를 해체한다고 선수들을 협박하고, 학부모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학교 이사회와 전남도교육청에 교장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프트볼팀 운영과 관리에 관심이 없는 학교에 아이들을 선수로 맡길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소프트볼팀을 해체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소프트볼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8월쯤 이 학교의 비리 교사와 체육회 관계자, 학교 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이 없다"며 "고발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장김치 들고 활짝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에 참가한 후원기업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 조건 위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인사과정에서 임용 조건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전보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A 교사를 임용했다.

임용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는 임용 전 소속 기관으로 원대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다.

임기 만료 후 A 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2015년 재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했다.

2013년과 달리 2015년 임용 조건에는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다.

문제는 A 장학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의 공모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A 장학관이 공모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공모 직위 해제와 함께 2016년 9월1일자 인사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장학관과 지원청 과장이 동일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팀장급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이 지원청의 보직 과장으로 전보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전'으로 평가했다.

이경호 의원은 "시교육청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을 원대 복귀시켜야 함에도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한 것은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A 장학관이 비정규직과 안전문제, 사학정책 등 어려운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전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슈 판결

40대 남성 도로서 추락사…광주 동구청 1억4천만원 배상 책임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옹벽 아래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광주 동구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일 A씨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광주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구청이 총 1억4745만6697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사망 당시 44세)는 지난 2016년 2월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손수레를 들어 옮기려고 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인근으로 온 상황이었다.

A씨는 손수레를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2.8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해당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동구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교통사고 방지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방호조치의 무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에는 추락방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높이는 1.1~1.2m가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점에는 철재 난간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높이가 0.45m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이 사고 이후에야 난간대를 설치 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도로에는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동구청은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